

「고용할당제」 도입 급하다

여 성

정 책

26일 열린 「6공여성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는 6공여성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에 대한 배려를 공인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자가 차기 정부에서 펼칠 여성정책의 폭과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이날 이승우교수(성심여대)가 지정한 차기정부의 과제로는 이밖에도 △불평등고용에서 여성이 갖는 불이익을 방지할 법 제정 △고용차별

여성정치연구소 주최 논단서 지적

- 대를 이어 선거전에 열렸던 여성단체협의회 추천 간
- 「탈북민을 대담한 여성에 대한 배려를 공
- 임한 金泳三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정부에서 펼칠 여
- 성정책의 폭과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시설의 확충과 직장악소설치법위헌대△기존의 유관방지법을 대체할

차기정부의 핵심과제 인식 필요

성폭력특별法 제정등 서둘러야

매매방지법과 성폭력특별법제정△정신대문제 해결 등이 있다.

이승우는 우선 「차기정부 5년 동안 추진할 여성정책의 과제들을 명확히 선정하고 이를 집

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자문기관이 아니라 출현한 예산과 집행력을 지닌 독자적인 여성담당 기구 설립, 여성문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에 내세웠고 여성단체들이 주장했던 여성정책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이것들을 최대한

수렴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한편 孫鳳淑 여성정치연구소장은 「6공여성정책이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러 보육법제정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으나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 수립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인 것으로 평가, 「차기정부는 여성의 실질적인 권리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孫소장은 「차기정부는 여성정책을 국가정책의 부수과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야 하며, 후쿠제 폐지, 부부간 상속증여제 폐지, 양친 모두에게 적용하는 출산 휴가 휴가의 마련, 성폭력특별법 제정 등 6공여성정책이 이뤄지지 못했던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정부는 여성의 고용조건 개선, 성폭력방지등에 우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 는게 여성계의 지적이다.

여 성